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평화, 상생의 국제 질서 모색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연구기관 · 학술서 줄이어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의 거센 돌풍이 몰아쳤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망언으로,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동북아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한·중·일 사이에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 역사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동아시아적인 시각으로 평화와 연대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창작과비평>에서 '동아시아론'이 제기된 이후 '동아시아'는 국내외 진보적 지식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창작과비평> 2005년 봄호는 특집으로 '동아시아의 변화, 한국사회의 대응'이란 주제를, 가을호는 '아시아인에 의한 동북아 평화는 가능한가'란 주제를 내걸었다. <황해문화>는 2004년 겨울호에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읽기'란 기획을 실었고, 2005년 가을호에서는 '광복 60년, 일본을 다시 묻는다'라는 특집 하에 동아시아의 평화, 공생 문제를 논했다.

<창작과 비평> 필두로 성균관대 · 울산대 등 연구 활발

학계에서 동아시아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2000년에 개원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이다. 유학사상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과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회를 연구함으로써 국제적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외 석학 초청 강좌,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동아시아학 정립에 힘써 왔다. 올 1월엔 학술원 산하 대동문화연구원이 '동아시아 근대지성의 동아시아 인식'을 주제로 동양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보다 실천적인 동아시아 담론을 연구하고 있는 울산대 동아시아 연구센터는 가족, 기업,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비교·정치철학적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을 정립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철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역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은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듯 동아시아 담론을 다룬 학술서적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95년 첫 권을 발간, 현재 36권까지 나온 <서남동양학술총서>(문학과지성사)는 동아시아 담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김용운·진순신, 문학사상사)는 한·중·일 3국의 역사, 현실, 문화를 통해 21세기 동북아 미래를 전망한 책이다. <동아시아 정체성을 묻는 오늘의 시각총서>(전 4권)(성균관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청어람미디어)는 한·중·일이 공유하는 유교문화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동아시아 담론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시리즈>(전 6권)(창비)는 중국, 일본, 타이완의 새로운 지적실험을 소개해 대안적 동아시아 담론을 제시했다.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김시업·마인섭 편, 성균관대 출판부)은 동아시아학술원 개원 기념 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으로 세계 각지의 동아시아 연구 현황과 문제점, 전망을 담았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백영서 외, 창비)는 동아시아 담론에 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고찰이 담겨 있다.

현 정부가 국정 지표로 '동북아 중심 국가'를 제시하고 경제계에서는 '동아시아 경제 블록'을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엔 학문적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신 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지역연대 강화와 상생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필**

취재 김지희 기자

